

‘가짜 친환경농산물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소비자는 속상! 농가는 울상! 유통업자는 밍상!

우리는 지금 유기·친환경농산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양적문제의 시비를 없앤 작물보호제의 공이 작지 않았고 친환경농산물 모두가
 곧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이거나 무농약농산물일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어떤 방향으로 쏠리거나 기운다는 의미의 트렌드(trend). 한 시대의 풍조나 유행의 양식을 말할 것이다. 하기가 특정기간의 대세이니 딱히 잘못 되었다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옳은 것만도 아닐 것이다. 혹 부화뇌동(附和雷同)에 다름 아닐지도 모르겠다. 남이 하니까 웬지 나도 따라 해야 될 것 같은 군중심리는 또 아닐까? 형식과 체면을 중시한 폐단의 한 면은 아닐까? 최근 근거 없이 열풍처럼 일고 있는 유기·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맹신을 두고 한 말이다.

우리는 지금 유기·친환경농산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진정성이 인구에 회자 된지 오래지만, 그런 일면은 차치(且置) 하고서라도, 농업여건이나 농산물 중 비중을 감안한 유통과정에서의 대소의 문제점 또한 의혹의 눈초리를 줄곧 받아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이런 저런 세간의 우려가 유아무야 덮여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양적문제의 시비를 없앤 작물보호제의 공이 작지 않았고 그나마 친환경농산물 모두가 곧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이거나 무농약농산물일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위반비율과 소비자 불신의 모습

올해 들어서야 겨우 전체 농산물의 10% 정도에 턱걸이 한 친환경농산물이 그동안 그렇게도 활개를 치며 지나칠 만큼 과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왔다고 여겨지는 것은 비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피해의식일까? 유감스럽게도 그 중의 70% 이상이 농약을 일상보다 반 정도만을 적게 쓴 저농약농산물임을 아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저농약농산물의 신규인증이 없어지는 2010년과 기존 인증농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이후

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열풍과 대세가 이어질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곡물자급률 28%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라에서 그저 맹신하고 이어나가야 할 트렌드는 아닌 듯싶다.

소비자의 90%이상이 일반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32%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상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난제중의 난제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2007년도 국내 농산물 부적합율은 1.3%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결과다. 그렇다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도 아니다. 당장 폐기되거나 용도를 전환하고 출하를 연기시켜 안전한 농산물임이 판명될 때 그제서야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농산물로선 참으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의 평가이다.

반면 친환경농산물의 위반 비율은 2-3%로 나타난다. 일반농산물의 10%에 불과한 세어를 지니고 있는 시장의 부적합 비율치곤 적잖은 위반비율일수도 있겠다. 설령 위반비율이 낮다 치더라도 32%에 육박하는 소비자 불신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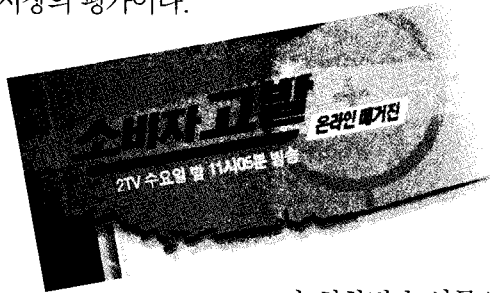
이는 모 교수가 집필한 농산물 유통연구 시리즈를 통해 다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반 상품이나 그 특성과 달리 농산물 안

전성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은 물론 소비하고 난 후에도 진위를 알 수 없다는 특성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짜일 확률을 사실 이상으로 높게 고려하여 생산자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구매하려 하고, 반면 제 값을 받지 못한 생산자는 가짜를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교수는 인증절차 및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확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히 상황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은 지난 7월 22일 방송된 KBS-2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입증해 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좋은 먹거리를 사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실태를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세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유통단계에서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해 가짜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현장을 집중 취재, 보도한 것이다. 물론 일어탁수(一魚濁水)일수도 있는 이번 사례로 인해 양심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박 학 순
한국작물보호협회 홍보부장



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소비자라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소비자가 믿고,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이 진정한 친환경농산물이며 또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올바른 정착 위한 제반여건 조화 이뤄야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대부분은 허탈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값이 비싸다고 여겼으면서도 그저 일반농산물보다 안전해서 건강에 좋겠거니 하며 자위했을 터인데 그런 농산물이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진짜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되어 자기 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비양심적인 유통업자가 건강에 좋은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 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친환경인증 스티커”만을 불법으로 인쇄, 사용함은 그나마 신사적(?)일 수도 있겠다. 친환경 농가의 인증번호와 대형 유통업체의 친환경 브랜드를 불법 도용하는 사례에서는 아연하고 실색한다. 심각한 것은 인증번호의 경우 재배 농민도 모르는 사이 도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서울의 한 청과시장에서 진짜 친환경농산물이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친환경인증마크가 부착된 수박을 구입,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증마크는 가짜이고 인증번호 또한 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을 통해 방송된 해당 상인들은 그저 몰랐다는 발뺌으로 감추기에 급급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학교급식 납품 확산과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친환경농업대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겠다. 그러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은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구입,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살펴본 결과, 일부 상품은 우수한 상품으로 확인 되었으나 일부 구입된 상품은 품질이 낮아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농산물로 판명되었다.

또한 소비자 고발 제작진은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50개의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6개 상품에서 친환경인증스티커가 없음을 확인했고 구매 상품 중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멜론, 감자 그리고 유명 백화점의 친환경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농산물까지 가짜친환경농산물임을 밝혀 냈다. 점입가경인 것은 정착 해당 농가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30명의 농가가 자신의 농산물이 인터넷으로 팔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유통과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가 지인으로부터 친환경인증

스티커가 붙어있는 박스를 빌려 포장에 나서고, 결국 일반농산물은 친환경 인증박스에 담겨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대목에선 실소(失笑)가 절로 난다.

진행을 맡은 PD는 끝으로 “친환경 농가의 인증번호를 도용하고 친환경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이라고 속여 파는 일부 업자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회의감을 표한 뒤 “이런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양심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그리고는 “친환경농산물의 보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한다. 언론의 역할에 재삼 고개가 숙여진다.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에 달할 만큼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에 참여한 농가 수와 재배면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지원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와 소비자들의 과학에 기초한 균형적인 사고, 작물보호제와 관행농산물은 무조건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상술 지양 등 제반 여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값비싼 유기농(Organic) 식품이 일반 식품과 영

양학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건강에 이롭다는 근거도 없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해당 농법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보도가 실망스럽다는 궁색한 반론을 편다.

반면 관행농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일반 식품대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해야 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음이다. 그저 일반농산물을 위생적인 차원에서 깨끗이 세척하여 마음껏 즐기면 되는 것이다.

혹세무민하는 일부 상술을 단호히 견제하고 과학의 진보를 마음껏 즐겨야 한다.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물보호제의 길’을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무엇이 두려워 전근대적이며 원시적 농법과 농산물 선택을 요구하고 갈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업계는 지금까지 작물보호제를 폄하하는, 우리와 다른 어떤 농법도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며 그만큼 유의성이 큰 자재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인들이다. 그들에게 언제까지 허울 좋은 농법으로 감당키 어려운 명예를 지워줄 순 없는 노릇이다. 진정 친환경농업 10년을 재조명하고 혹 지금까지의 보폭이나 방향이 무리한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 볼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소비자의 이성적 과학적 판단이 가미된다면 금상에 첩화일 것이다. 먼 나라에서의 기침소리에 깜짝 놀라는 형국 아닌가? Y